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에 대한 고찰*

구춘권 | 영남대학교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을 추적하며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작업은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에 대해서는 물론, 중도를 표방했던 국민정당들에 대한 지지율 하락 및 특히 사민당(SPD)이 처한 정치적 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우선 제2장에 서는 코포라티즘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독일은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기반이 되었던 계급타협이 위축되면서 경쟁적 코포라티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코포라티즘이 출현했음에 주목한다. 제3장은 보다 특수한 역사적 사례로서 독일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기원·위기·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독일 코포라티즘의 결정적인 전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전환기에 '노동을 위한 동맹'으로 알려진 코포라티즘의 부활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임금억제라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추구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실패는 독일의 코포라티즘이 일방적·상징적 코포라티즘으로 전환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코포라티즘, 독일, 독일모델, 노동을 위한 동맹, 사민당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에 의한 것임. 익명의 세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세심하고 수준 높은 논평에 감사드린다.

1. 들어가는 말

독일정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은 최근 몇 개의 선거결과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2017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두 거대 국민정당(Volkspartei)인 기민련(CDU)/기사련(CSU)과 사민당(SPD)은 각각 32.9%와 20.5%의 지지를 받았다. 이 수치는 이 두 정당이 전국적 차원의 선거에서 기록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반면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2.6%의 지지를 기록함으로써 일약 제3당으로 부상했다. 극우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0.7%의 지지를 얻은 자유당(FDP)이 제4당으로 연방의회에 다시 진입했고, 좌파당(die Linke, 9.2%)과 녹색당(die Grünen, 8.6%) 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정당의 연방의회 진출도 충격적이지만, 사민당의 지지율 하락도 극적이다. 사민·녹색 연정이 처음으로 출범했던 1998년 선거와 비교할 때 사민당의 득표율은 40.9%에서 20.5%로 20여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사민당의 추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9월 작센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은 자신의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 7.7%의 지지를 받아 제5당으로 전락했다. 15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거대 국민정당이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추락한 것은 구 동독지역이라는 작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충격적이었다. 사민당은 작센에서 일약 제2당이 된 ‘독일을 위한 대안’에 무려 20%나 뒤처짐으로써 급기야 대연정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등장했다.¹⁾ 결국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녹색당이 대연정에 추가로 참여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대 국민정당, 특히 사민당에 대한 극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표출되는 독일정치의 지각변동은 2019년 10월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8.2%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제4당으로 추락했다. 23.4%의

1) 작센의 선거결과는 기민련(32.1%), ‘독일을 위한 대안’(27.5%), 좌파당(10.4%), 녹색당(8.6%), 사민당(7.7%)의 순이었다. 선거 관련 수치는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른 것임.

지지를 받은 ‘독일을 위한 대안’이 기민련(21.7%)을 추월하고 제2당으로 부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좌파당이 31%의 지지를 얻어 지금까지 줄곧 1위를 지키던 기민련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좌·우 양편의 정치적 극단주의로 지목되는 두 정당이 제1당과 제2당이 되고, 둘을 합친다면 과반수가 넘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구 동독지역이라는 작센과 튀링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의 선거결과는 전후 독일정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간에 위치했던 거대정당들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을 정치적 극단주의, 특히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독일 민족(Volk)³⁾의 정체성을 내세운 극우세력의 부상은 2015년 난민위기와도 무관치 않지만, 비단 난민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극우세력은 노동이 위축되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만들어진 정치적 공간을 성공적으로 파고들었다. 실업, 빈곤,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등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이른바 ‘문제 지역’일수록 극우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극우정당의 부상은 합의와 타협이라는 코포라티즘의 전통이 약화되고 손상됨으로써 정치적 중간이 위축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의 성공은 독일 코포라티즘이 21세기에 들어 큰 위기에 빠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위기는 정치적 중간에 포진된 거대정당들이 쇠퇴하고 좌·우 양쪽, 특히 오른쪽에서 급진적인 세력이 성공적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중도우파를 자임하는 기민련/기사련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중도좌파 격인

2) 2019년 9월 마찬가지로 구 동독지역인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은 23.5%의 지지를 얻어 제2당이 되었다. 시민당이 26.2%의 지지로 극우 정당을 겨우 앞섰고, 기민련은 15.6%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3) 이는 프랑스 혁명에서 등장한 정치적·법적 단위로서 민족(nation)과는 구별되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가 탄생시킨 민족이다. 혈연적·언어적·문화적 동질성 및 역사적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폴크’를 구성하는 요인들이다.

사민당은 보다 극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사민당은 물론이고 기민련/기사련조차 자신이 원하는 연정을 주도할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연방 차원에서 단 한 번만 보수·자유연정이 집권했으며, 나머지 세 번은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만들어져야만 했다. 이 대연정은 이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선호하는 다수(과반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마지못해 등장한 변통책이었음은 물론이다. 대연정이라는 사실 전후 독일 정치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험이 21세기에 들어 반복되는 상황이야말로 독일정치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독일 코포라티즘의 지지대였다고 할 수 있는 사민당의 정치적 하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코포라티즘의 위기는 중도를 표방했던 거대 국민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독일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전환이 가져온 정치적·사회적 결과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 이 글은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을 추적하며 재구성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코포라티즘에 대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코포라티즘의 변화를 개념화하고자 시도한다. 주지하듯이 코포라티즘은 독일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독일을 넘어선 현상이었다. 독일을 비롯해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코포라티즘은 일종의 계급타협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노동과 자본의 이해를 중재함으로써 발전했다. 이는 흔히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 통칭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경제적 지구화가 추진되고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계급타협이 위축되었기에 코포라티즘의 쇠퇴가 전망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독일과 북유럽에서는 물론,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거의 없는 남유럽 국가들에서조차 새로운 노·사·정의 협력이 등장했다. 이 협력은 무엇보다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임금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흔히 경쟁적 코포라티즘으로 지칭된다. 제2장은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경쟁적 코포라티즘의 목표와 내용은 물론, 그 변화의 맥락과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은 보다 특수한 역사적 사례로서 독일 코포라티즘의 기원·위기·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독일 코포라티즘은 반(反)파시즘과 평화라는 전후 등장한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보수·자유연정의 오랜 집권기를 거치면서 코포라티즘은 침체와 위기에 빠졌다.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분기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의 기간이었다. 이 시기 ‘노동을 위한 동맹’으로 알려진 코포라티즘의 부활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동맹’은 노·사·정의 상징적인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동맹’이 제시한 목표가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억제라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변질되면서 ‘동맹’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사회적 코포라티즘에서 경쟁적 코포라티즘으로의 변화는 독일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역사적 전환기의 중심에 사민당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뭇 역설적이다. 21세기의 독일모델이 보여주는 긴장과 딜레마, 즉 놀라운 경제적 회복과 정치적 양극화 사이의 모순은 이 전환의 구조를 포착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경쟁적 코포라티즘

정치학에서 코포라티즘은 상당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코포라티즘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코포라티즘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중세 장원제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당시에도 이미 코포라티즘적 협력형태, 즉 직능집단들(corporations)에게 일정한 정책결정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화를 꾀했던 시도가 있었다(정병기·도묘연 2015, 36-41). 20세기 전반 파시즘이 지배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조직이나 직능집단들을 위계적이고 때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형식적인 참여를 강제하기도 했다. 이 역사적 경험은 흔히 국가 코포라티즘 또는 권위주의적 코포

라티즘이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강제적 코포라티즘은 공적 결정에 참여하는 직능집단들의 자율성·자발성·민주주의적 의사표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에 코포라티즘의 전사(前史)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글에서 지칭하는 코포라티즘은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채 다수⁴⁾를 구성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도 있지만(다수제 민주주의), 공적 결정의 이해관계자들(직능집단들)을 협의의 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합의와 타협에 의존해 통치할 수도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가 대통령이나 의회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에서 다수를 확보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반면, 코포라티즘은 협의의 장을 확대하고 심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공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arrison 2019).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의 한 형태로서 코포라티즘을 이해한다면, 이는 몇몇 예외적인 국가들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학이 코포라티즘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였다.⁶⁾ 이는 1970년대에 들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시대’(Marglin and Schor 1991)가 종식되면서 등장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주요 직능집단들, 특히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의 이해 갈등을 중재하면서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철학자 헤겔의

- 4)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항상 절대다수, 즉 과반수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주의를 전제하는 민주주의가 통치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견해에 거슬릴지라도 다수(과반수)에 의해 지지되기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공적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 5) 이른바 ‘강한’ 코포라티즘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좀 더 일찍 발전했다. 여기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속한다. 코포라티즘을 강·중·약으로 분류한 페르귄스트에 따르면 독일은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중간에 속한다(Vergunst 2010). 민주주의를 강·중·약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듯이, 코포라티즘을 강·중·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논쟁적임은 물론이다.
- 6) 우리 학계에서는 최장집이 코포라티즘 논의를 처음으로 수용하여 한국에 적용한 바 있다(최장집 1983). 이후에 제출된 본격적인 연구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강명세 1999; 김인춘 2002; 정병기 2004).

비유를 빌리자면 “황혼녘에서야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처럼 정치학은 코포라티즘의 황금시대가 저물어갈 무렵에야 이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 노동과 자본의 타협은 당연시되었고,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굳이 제도화된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에 이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덜 되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포드주의적 계급타협(Fordist class compromise)’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다(Anderson and Camiller 1994; Deppe 1997; Wright 2000). 이 계급타협의 핵심은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이를 대변하는 정당들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쌍방향의 정치적 교환을 달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거칠게 얘기해 이 정치적 교환은 다음을 내용으로 했다. 노동조합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부상했던 자본의 사회화 및 경제의 민주화라는 사뭇 급진적인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시장경제 및 확장된 복지국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정치적 교환으로 보상받았다. 경영자단체들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특징적이었던 임금 압박 및 저임금 경쟁을 포기하고 생산성 상승에 연계된 실질임금의 상승을 약속하였다. 대신 노동조합들은 파업 자제를 통해 경영에 협력함으로써 산업 평화가 구현될 수 있었고, 또한 미래의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이윤 몫에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방향의 교환이야말로 계급타협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코포라티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선도했던 미국의 슈미터와 독일의 램부르흐는 계급타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타협을 가능케 만드는 조건들 및 구조에 주목한 바 있다(Schmitter and Lehbruch 1979). 코포라티즘을 협의민주주의의 정책결정의 한 모델로서 파악했던 램부르흐는 협상에 의존해 성공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했다. ① 노동조합들이나 사용자단체들과 같은 직능집단을 통해 생산

자들의 이해관계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② 이 직능집단들과 정당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소통하고, ③ 정부와 직능집단들 사이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④ 특히 노동조합들이 중요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⑤ 협상된 결과의 이행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Lehmbruch 1977). 이에 비해 슈미터는 구조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는 코포라티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직능집단들이 ①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인정되고, ②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③ 협상 과정에서 대표성을 독점하고, ④ 상호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Schmitter 1977). 즉 대표성을 독점한 기능적으로 분화된 직능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상호 협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코포라티즘의 핵심인 것이다.

렘부르흐와 슈미터의 논의는 전후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책결정의 특징 및 국가의 구조원칙을 파악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일찍이 손필드(Shonfield 1965)가 제기한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이 코포라티즘에 의해서도 가능함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정치적 다원주의가 전제하는 권력의 분산과 다원성 및 정치권력을 향한 경쟁은 광범위한 역사적 시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행위능력, 정부의 결정력, 그리고 정치적 협력의 사회경제적 내용을 설명하는 데 다원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야말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들의 경쟁이 정책으로 표출되었기보다는 주요 계급, 즉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 주요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렘부르흐와 슈미터는 코포라티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의 정치적 협력의 독특함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⁷⁾ 그렇다면 이 시기 정치적 협력의 사

7) 물론 조금은 다른 결에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코포라티즘에 접근한 논의들도 있다. 그러나 이 논의들 역시 코포라티즘의 계급타협적 성격은 염두에 두고 있다. 예컨대 에스핑-안데르센은 코포라티즘적 타협이 강력한 노동자조직들의 출현 및 투쟁에서 가능해졌음을 강조한다(Esping-Andersen 1985). 이에 반해 펼쳐는 사용자들의 전략, 즉 사회 안

회경제적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코포라티즘적 협력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한 마디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케인스주의적 총수요관리 정책으로 압축된다. 주지하듯이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은 공급과 수요의 엄청난 괴리가 폭발한 결과였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심연으로 빠뜨린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홉스봄 1997, 137)를 목격한 케인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의 나침반이 된 새로운 혁명적 사고를 제시한 바 있다(Keynes 1973).⁸⁾ 이 사고의 핵심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화폐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제한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을 둔 유효수요를 창출해냄으로써 공급의 팽창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개의 지렛대에 의존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대량생산은 물론 대중적 풍요를 가능케 한 대량소비가 현실로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가 열린 것이다.

케인스주의적 거시경제 정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의 협력 및 계급타협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케인스주의적 화폐정책은 낮은 실질이자율을 강제함으로써 금융자본의 기생적 성격을 대폭 제한하였고, 실물자본의 원활한 축적에 금융자본의 이해를 종속시켰다(Mattfeldt 1985, 60).

정을 위해 중앙집중적 협상체계를 선호했던 자본의 이해관계가 코포라티즘을 발전시켰다고 본다(Fulcher 1991).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선 파니치는 코포라티즘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했다. 자본주의 국가는 개별 자본들의 단기적·직접적 이해를 넘어서 “상상의 총자본”으로서 장기적·구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코포라티즘은 이 “상상의 총자본”의 사회통합적 노동통제 전략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Panitch 1986).

- 8) 케인스는 동시대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대량실업 및 부와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에서 보았다. 이 두 가지야말로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 끔찍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케인스는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경제학 이론과 작별했고 자신의 새로운 사고, 즉 자본주의 경제에서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스키델스키 2000, 117; Wilke 2002, 13-14).

실물경제의 원활한 축적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낳았고, 이는 완전고용의 배경이 되었다. 1960년대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의 평균 실업률은 완전고용이라 할 수 있는 1.5%에 불과했다. 완전고용은 노동계급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간의 권리로서 노동 개념을 실현했으며, 자본 측에도 산업적·사회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화폐적 축적의 자립화를 강력하게 억제했던 케인스주의적 화폐정책은 실물자본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것이다.

둘째, 케인스주의적 재정정책은 보다 직접적으로 노동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강력한 노동조합들의 협상력 덕택에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높았고, 그 결과 산업별·기업별 임금수준이 상당히 균등화되었다. 국가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동권적 규제들과 노동시장적 조치들을 도입했다. 노동계급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지원 역시 노동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Lutz 1992, 45). 노동계급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고유한 딜레마로 지목되던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크게 줄어들었고,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다. 수요의 확대는 다시금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자본의 과잉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케인스주의적 재정정책은 노동은 물론 자본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준 계급타협의 선순환적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케인스주의적 총수요관리 정책의 실패는 코포라티즘적 협력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1973/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드러난 경제위기와 함께 총수요관리 정책은 무력함을 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케인스의 해법은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제도들을 발전시켰지만, 수익성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증대로 표현된 공급 측에 원인을 둔 경제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급 측에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통한 추가수요의 창출은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컸다. 따라서 공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요구하는 이른바 공급중심의 경제학,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최고의 목표로 내세운 통화주의 경제학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신자유주의

의 시대의 막이 열린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입장에서 1970년대 중반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매우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재편의 프로젝트였다(Ptak 2017). 이 프로젝트는 임금비용의 삭감, 노동의 유연화, 자본집약적 설비의 사용강도 강화와 가동시간 연장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친화적 요소들을 정착시킴으로써 자본의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신자유주의적 세력의 득세와 함께 케인스주의적 총수요관리 정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 관찰자들은 이를 “조직된 자본주의의 종언”으로 진단하였다(Lash and Urry 1987). 특히 노동관계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임시계약직, 파견직, 파트타임, 유사자영직 등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확산되었고,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을 주로 조직했던 노동조합들의 기반이 크게 잠식되었다. 이러한 노동관계의 유연화는 조직된 노동의 힘과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것이기에 코포라티즘 역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Ferner and Hyman 1992).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 목격된다.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코포라티즘적 협력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등장한 것이다. 코포라티즘의 재활성화는 노·사·정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았던 북유럽에서는 물론, 주로 암묵적인 형태로 협력이 진행된 독일과 같은 나라,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거의 없는 남유럽 여러 국가에서조차 등장했다(<표1> 참조). 그렇다면 이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어떤 사회경제적 내용을 담았기에 신자유주의와 공존할 수 있었던가?

〈표1〉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과 합의내용

국가	코포라티즘적 협력의 명칭	임금억제 관련 합의내용
그리스	노사정 신뢰협약(1997)	인플레이션 및 생산성 상승에 상응한 임금인상
네덜란드	노사협약(1982, 1993, 1999)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완만한 임금인상
노르웨이	노사정 소득정책 합의(1992, 1999)	주요 교역국가들 평균 수준의 임금인상
덴마크	노사정 선언(1987)	경쟁국가들의 임금발전에 상응한 임금인상
독일	노동을 위한 동맹(2000)	생산성 상승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단체협약
아일랜드	노사정 합의(1987, 1990, 1994, 1997, 2000, 2003)	유럽안정화협약에 상응한 임금상승
이태리	노사정 합의(1993, 1998)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상승을 반영한 임금인상
벨기에	범산업적 노사합의(1998, 2001, 2003)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에 연계된 임금인상
핀란드	노사정소득정책위원회 합의(1995)	인플레이션 및 생산성 상승에 상응한 임금인상
포르투갈	노사정 고용협약(1996)	인플레이션 및 생산성 상승에 상응한 임금인상
스웨덴	산업부문 노사합의(1997)	유럽연합 평균 수준의 임금인상
스페인	국가적 임금합의(2002)	실질 임금비용을 상승시키지 않는 임금인상

출처: Schulten 2004, 255를 토대로 작성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노·사·정 대화의 장의 확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은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노동과 자본의 협력을 통해 케인스주의적 총수요관리 정책, 즉 화폐정책과 재정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이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표1> 참조).

주지하듯이 이 무렵이면 ‘단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역내시장이 완성되어 출범했다. 또한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서명됨으로써 경제화폐연합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 실험이 결정되었다. 단일시장과 공동화폐로 이어지는 유럽통합의 심화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일종의 거대한 전환의 압력으로 작용했다.⁹⁾ 즉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수렴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폐·재정·복지·임금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와 적응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다. 특히 임금억제가 강조된 것은 공동화폐의 도입과 더불어 임금수준이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Sauramo 2015, 402). 그런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러한 전환과 적응의 압력을 왜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에 의존해 돌파하려 시도했던가?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회원국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97년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에 이어 1998년 독일 사민당이 제1당이 됨으로써 유럽의 주요 세 나라에서 좌파 정당들이 집권에 성공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면 당시 유럽연합 열다섯 개의 회원국들 중 열한 개의 국가에서 좌파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거나 연정의 형태로 정권을 주도했다. 코포라티즘적 협

9) 유럽통합의 심화가 자본주의적 축적공간의 확대와 결부되어 있음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Bieling 2014; Jessop 2014; Rötger 1997). 일찍이 쾰트거는 국민국가적 성장모델, 유로자본주의, 지구적 정치경제라는 세 개의 축을 서로 충돌하는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모순적인 단일체(widersprüchliche Einheit)”의 구성요소들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ötger 1997, 146). 요컨대 이 시기 유럽통합을 진전시켰던 힘은 경제적 지구화의 추진력임과 동시에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을 재편하는 압력이었다. 유럽통합의 심화는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의 공간적 한계를 경제적 지구화를 추진함으로써 타파하려는 거대한 정치경제적 전환의 유럽적 모습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 세 개의 모순적인 힘은 동시에 존재하며 함께 작용하는 힘이다(구춘권 2020).

력이 확산되는 유리한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한편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이 지속적으로 코포라티즘적 노선을 취했던 국가들, 또는 아일랜드처럼 자유주의적 노선으로부터 코포라티즘 쪽으로 선회한 국가가 경쟁력과 고용창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였다(Teague 1999). 좌파 정당들의 집권이라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모델이 부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는 새로운 코포라티즘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코포라티즘의 변화는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가의 구조원칙과 같은 제도적·형태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코포라티즘적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변질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노동소득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던 수요중심적 또는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이제 임금억제 및 간접임금의 절감을 목표로 한 공급중심적 코포라티즘(Traxler 1995) 또는 경쟁적 코포라티즘(Rhodes 1998)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경쟁적 코포라티즘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내용은 주로 노동측의 양보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임금억제가 노동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임금상승을 주변 경쟁국들의 임금발전과 연계시킨다는 합의 역시 이들 나라에 임금상승이 없을 경우 자동적인 임금동결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상승을 반영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미미한 생산성 상승의 시기에는 사실상 임금억제를 강제한다. 이밖에도 경쟁적 코포라티즘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들의 도입, 법인세의 삭감,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직접세로부터 간접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시행된 대부분의 조치들은 노동의 입지를 위축시킬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노동과 자본의 세력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잘 보여준다(Butterwegge et al. 2017). 한

편 노동 측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것은 고용유지나 고용창출에 대한 약속처럼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성격의 것에 불과했다.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특징적이었던 정부의 중재에 의한 노·사 양방향의 대칭적인 교환은 경쟁적 코포라티즘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교환으로 변질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서유럽의 몇몇 작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결합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협약 이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억제를 결합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대량실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덴마크는 노동자 재교육과 일자리 중재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업 시 관대한 소득보상과 연계시킴으로써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이 두 나라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즉 이른바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안재홍 2013)에서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사실상 종결되었다(Kompsopoulos 2015).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력을 지닌 흑자국에 속한다. 이들 나라에서 새로운 코포라티즘적 협력이 대량실업의 완화에 기여한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과연 경쟁력 강화에 추가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다. 어쨌든 이 작은 나라들을 제외한다면 경쟁적 코포라티즘의 성과는 노동의 입장에서는 그리 고무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자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정부의 입장에서만족할 부분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로 독일 코포라티즘의 전환을 살펴본다면 코포라티즘의 변화의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III. 독일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기원 · 위기 · 전환

1. 독일 코포라티즘의 기원

잘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들의 협상력, 정치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단일노조 지붕조직인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의 위상, 사민당은 물론 기민련 내부에도 노동자 계급에 우호적인 세력의 존재, 노동조합들과 정당들 사이의 소통 및 유대관계, 다른 한편 강력한 사용자조직들의 존재 및 영향력, 그리고 사용자조직들과 노동조합들 간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실력 있는 정당들의 존재 및 이들 정당에 축적된 통치 경험 등등, 이와 같은 요소들은 독일의 정치체제가 다원주의적 모델보다는 코포라티즘적 모델에 더 부합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코포라티즘은 예컨대 스웨덴처럼 긴 역사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산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전쟁은 없고, 더 이상 파시즘은 없다(Nie wieder Krieg, nie wieder Faschismus)”는 전후 가장 유명한 구호가 표현하듯이(Doery 1985, 108), 평화와 반(反)파시즘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 사회적 합의의 성립이야말로 독일에서 코포라티즘이 가능해진 중요한 배경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反)파시즘이라는 합의가 일정하게 반(反)자본주의적인 내용들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에게 권력을 가져다주었던 것은 무엇보다 세계경제대공황이었고,¹⁰⁾ 따라서 반(反)파시즘은 대공황을 낳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동반하고 있었다.

일정하게 반(反)자본주의적인 내용을 포함했던 반(反)파시즘이라는 합의는 당시 ‘사회주의’¹¹⁾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태도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사민

10) 1928년만 해도 2.6%에 불과했던 나치당의 제국의회 득표율은 대공황과 함께 가파르게 치솟았다. 대공황은 중간계급과 하층 중간계급을 급진화시킴으로써 파시즘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시켰다(홉스봄 1997, 124-155).

11) 물론 여기서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구권의 현실사회주의적 질서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을 인정했지만 시장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당의 입장에서야 당연하겠지만 당시 기민련조차 1946년 ‘사회주의적 국민정당’을 표방하거나 ‘일상과제로서 사회주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매우 의아스럽기조차 할 것이다(Opitz 1979, 34). 당시 카이저(Jakob Kaiser)와 같은 기민련의 저명한 지도자들은 ‘기독교적 책임의 사회주의’를 설파하고 있었으며, 이는 나중에 가이슬러(Heiner Geissler)와 같은 기민련의 ‘노동자파(Arbeitnehmerflügel)’에 의해 계승되었다.

반(反)파시즘이라는 합의가 성립되면서 독일의 정치적 지형은 전반적으로 중간으로 수렴했고, 좌파와 우파의 세계관의 간격이 크게 줄었다.¹²⁾ 좌파와 우파는 모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과 조절의 원칙을 수용했다. 이들의 논쟁은 원칙을 두고서가 아니라, 원칙의 세부적 시행과 관련해 벌어졌다. 좌파는 보다 많은 사회국가와 적극적인 공공부문, 대자본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강력한 노동조합을 요구했던 반면, 우파는 노동조합을 어느 정도 꺼려하면서 공공부문이 시장과 민간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했다(Deppe 1997, 44). 좌파와 우파의 수렴,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조절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경제의 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능력을 크게 강화했음은 물론이다.

1950/60년대 독일의 보수연정은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¹³⁾를 내세웠지만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케인스주의적 총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수용했다(김수진 2001, 108; 암스트롱 외 1993, 211). 이 총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실행과 사회보장체계의 지원을 통해 노동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전후 독일에서 복지국가의 구축은 기민련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던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기민련의

소련식 현실사회주의에서 금기시되었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결사교섭의 자유는 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합의점이었음은 물론이다.

- 12)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극좌’ 세력으로 취급되던 공산당(KPD)은 1956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제도권에서 제거되었기에 이러한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13)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의 존재가 불가피함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적 자유주의나 나중의 신자유주의와 구별된다.

다수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우파나 보수보다는 중도(Mitte)에서 찾는 것이 이 시기의 경험과 무관치 않다.

전전 독일의 역사에서 매우 갈등적이었던 자본과 노동의 관계 역시 반(反)파시즘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출현하면서 결정적으로 완화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히틀러의 권력 장악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과거 노동계급의 정치적 분열을 반성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로 조직된 단일 노조들이 독일노동조합연맹이라는 지붕조직 아래로 묶여졌다. 사용자들은 독일사용자단체연합(BDA)이라는 연방 단위의 조직을 결성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자본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표했다. 전국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을 통해 생산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직되고 대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反)파시즘이라는 합의에 기반을 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타협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잘 표현된다.

노동조합은 급진적인 사회화의 요구를 포기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인정했으며, 역으로 사용자들은 직장위원회(Betriebsrat)를 통해 기업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했다. 바야흐로 기업 운영의 공동결정(Mitbestimmung)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¹⁴⁾ 또한 노동조합은 미래의 투자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이윤 몫에 합의하였고, 반대로 사용자들은 생산성의 상승에 상응한 실질임금의 인상에 동의하였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타협’이라고 지칭할 만한 쌍방향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타협과 쌍방향의 교환은 사회동반자(Sozialpartnerschaft) 관계로 알려진 노동과 자본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다. 이 사회동반자 관계 덕택에 전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주(Land) 단위에서 진행되는 산업별 단체협상은 상당히 타협적이며 예측 가능하다. 파업은 오히려 예외적이고, 파업일수 또한 유럽에서 가장 적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과 비교할 때 자율적이라는 점도 흥미

14) 1951년 공동결정법이, 그리고 1952년 노·사 간의 공동결정을 명시한 경영헌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이 발효되었다.

롭다. 국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단체협상의 자율성은 광범위하게 보장된다. 과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률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독일모델로 알려진 성공적인 수출에 기반을 둔 교역국가가 작동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 교역국가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독일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좌·우를 망라해 어떤 정권이든 중요한 목표는 독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수입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김면희 2004, 331; 송태수 2006, 192-193; Esser et. al. 1979).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야기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의 하락을 막기 위해 균형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조합들은 교역국가로서 독일모델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적인 자세를 취했다. 독일 제조업이 갖는 강력한 경쟁력은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이러한 합의와 협력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1950/60년대 보수연정 시기 독일의 코포라티즘은 명시적이라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작동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타협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명시적인 제도를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간의 이해를 중재하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입법했다. 노·사·정이 추구했던 목표는 대칭적인 쌍방향의 교환의 토대 위에서 달성되었다. 이로부터 독일 코포라티즘에 특징적인 동학이 출현했다. 기업들은 노조의 협력 아래 성공적인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적절한 이윤을 확보했다. 평화적인 노사관계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추가적으로 기여했다. 노동자들의 협조는 높은 임금을 통해 보상되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산업별 단체협약이 적용되었고, 따라서 소득 불평등은 작았다. 분배를 놓고 일어나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갈등은 상당 부분 해결되는 듯이 보였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시장적 지출과 사회복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낮았다. 흔히 “라인 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독일모델이 일구어낸 놀라운 성과는 만약 암묵적인 형태의 코포라티즘이 작동하지 않았다더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독일모델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1967년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2.1%).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놀랍게 낮은 실업률이지만 이는 심각한 위기로 진단되었다. 이 위기를 계기로 1966년 12월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대연정이라는 전후 최초의 정치적 실험이 시도된 것이다. 대연정은 출범하자마자 노·사·정의 협조행동(Konzertierte Aktion)을 조직하였다. 보수연정 아래서 암묵적인 형태로 작동했던 독일의 코포라티즘이 처음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협조행동에는 노·사·정, 즉 노동조합, 사용자조직, 연방정부에 더해 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와 연방은행이 함께 참여했다. 협조행동은 독일 코포라티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타협과 합의에 기반을 둔 쌍방향의 대칭적 교환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노동은 임금인상의 자제를, 사용자 측은 새로운 고용창출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적 조치들의 도입 및 소득보장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Schröder and Esser 1999). 1968년 독일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진입했고, 협조행동은 순항하지만은 않았지만 1977년까지 10년을 유지했다.

2. 보수·자유연정과 코포라티즘의 위기

12년 동안 사민·자유연정을 지휘했던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이 1982년 10월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집권세력이 교체되었다. 콜(Helmut Kohl)이 이끄는 보수·자유연정이 출범한 것이다. 이 사건은 독일 또한 지구적·유럽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동승함을 의미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탈규제 프로젝트로 꼽히는 단일유럽시장, 냉전체제의 종식과 독일통일,

유럽통합을 한층 심화시킨 경제화폐연합 등 콜 정부는 큼직큼직한 역사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지만, 코포라티즘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콜 정부 말기인 1997년 독일어학회가 선정하는 그 해에 가장 주목 받은 ‘올해의 단어’로 ‘개혁정체(Reformstau)’가 꼽힐 정도로 보수·자유연정은 최소한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다. 협조행동이 종결된 이후 제도적 차원의 코포라티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암묵적 형태의 코포라티즘만이 명맥을 유지했다. 보수·자유연정의 오랜 집권을 거치면서 독일모델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갔지만, 콜 정부는 이를 코포라티즘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코포라티즘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보수·자유연정 시기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압력은 주로 유럽통합을 지렛대로 행사되었다. 각국 기준의 상호인정 원칙에 기반을 둔 단일시장의 출범이 과거 독일의 촘촘한 규제망을 일거에 해체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반 철도·우편·정보통신 영역에서 일어난 민영화는 유럽연합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업이었다. 당시 철도 영역을 독점했던 분테스반(Bundesbahn)은 48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우편·정보통신 산업을 독점하고 소매은행업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졌던 분데스포스트(Bundepost)에는 54만 3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두 국영기업은 유럽연합의 철도지침, 정보통신지침, 우편서비스지침의 발효를 계기로 민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 지침들이 국가의 독점을 금지하고, 완전한 시장개방과 경쟁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통합이 심화되지 않았더라면 독일의 민영화는 매우 어렵고 난감한 과제였음에 분명하다. 독일모델의 시장중심적·경쟁적 재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지침들이 수행한 지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구춘권 2020; Bieleing and Deckwirth 2008).

둘째, 노동조합의 힘이 급속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여

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우선 노동시장이 점차 유연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고 있었다.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시장적 조치들이 허용되면서 임시계약직, 파트타임, 파견노동자, 유사자영업자 등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 주로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기존 노동조합의 기반이 잠식될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대량실업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는 다시금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내렸다. 1980년만 해도 38.2%에 달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년이 지난 2000년 25.3%로 크게 줄어 들었다(Greef 2014, 703).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주로 서비스부문에 창출되었기에 여성 및 청년층 등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얽힌 데 얽친 격으로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된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노동조합의 위기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Deppe 1985; Felder 1991).

셋째, 단일시장과 경제화폐연합을 지렛대로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던 시기, 독일에서는 생산입지논쟁(Standortdebatte)이 벌어진다 (안숙영 2010; Simons and Westermann 1997). 이 생산입지논쟁은 지구적·유럽적 차원의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생산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했다. 이는 특히 사용자 측의 관심이었음은 물론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과도한 간접임금이 독일의 생산입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보다 과감하게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며, 간접임금 또한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공세적 요구는 언론매체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입지로서 독일의 미래가 매우 위태롭다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경제화폐연합이라는 유럽의 새로운 현실 아래서 독일의 생산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의 수준에 맞추어 보다 더 적극적인 임금억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탈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커졌다. 생산입지논쟁은 일종의 경쟁력 담론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면서 독일 코포라티즘의 전환과정에서 자본이 주

도적 역할을 하는 배경이 된다.¹⁵⁾

3. ‘노동을 위한 동맹’과 독일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전환

보수·자유연정 시기 위기에 빠진 코포라티즘을 되살리려는 제안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등장했다. 생산입지논쟁에서 명백한 수세 국면에 몰렸던 노동조합으로서는 무언가 타개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독일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섬으로써 대량실업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사용자들은 대량실업이 생산입지로서 독일의 취약함 때문이라고 강변했지만,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마냥 방관할 수는 없었다.

1995년 말 당시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던 츠빅켈(Klaus Zwickel)은 노·사·정의 협력을 통해 대량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곧바로 사용자 측과 정부의 긍정적인 회신을 얻었다. 1977년 협조행동이 해산된 이후 실로 오랜 세월이 지나 코포라티즘이 제도적 차원에서 부활한 것이다. 1996년 1월 ‘노동과 생산입지 확보를 위한 동맹(Bündnis für Arbeit und Standortsicherung)’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의 새로운 협의의 장이 출범하였다. 흔히 ‘노동을 위한 동맹’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원 명칭에 ‘생산입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츠빅켈은 사용자 측과 정부가 대량실업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노동조합도 기꺼이 협력하고 양보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츠빅켈은 향후 3년 동안 금속산업 부문에서 33만 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맞추어 실질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수용할 것임을

15) 자본의 입장에서 독일의 문제점은 직·간접 임금비용이 너무 높고, 환경 및 노동과 관련된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독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독일모델, 즉 사회적 시장경제와 작별하고 “독일회사(Deutschland GmbH)”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안숙영 2010, 344). 생산입지논쟁은 독일의 사용자들이 코포라티즘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신자유주의적 노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합류했음을 잘 보여준다.

제안했다(DGB 2019).

독일의 부활한 코포라티즘은 매우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노·사·정은 실업률을 200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사용자 측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실행하고 강제할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합의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첫 번째 ‘노동을 위한 동맹’은 노·사·정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 각자 잘 해보겠다는 ‘좋은 의도(Goodwill)’를 표시한 것 이상의 의미를 담지 않았다(Arlt and Nehls 1999, 26). 노동조합의 위기가 명백해 보이고, 노동이 이미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과 정부는 노동조합과 타협할 진지한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 보수·자유연정은 ‘동맹’의 출범에 전혀 개의치 않고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추진해 나갔다. 보수·자유연정은 1996년 4월 연방의회에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계획’으로 이름 지어진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해고보호 조항을 완화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병가 시 임금 삭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동맹’이라는 협의의 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입법하려는 시도를 노동 측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맹’은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전락했고, 부활한 코포라티즘은 출발하자마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보수·자유연정은 1998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개혁정체’의 누적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 대량실업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기민련·기사련에 대한 지지가 역사상 최악으로 하락했다(35.2%). 시민당이 40.9%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6년 만에 다시 독일의 제1당으로 복귀했다. 시민당은 녹색당과 연정을 성사시켰고, 독일연방공화국 최초의 사민·녹색연정이 출범했다. 시민당은 이미 선거공약으로 코포라티즘의 활성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기대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1998년 12월 ‘노동,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이라

는 이름으로 두 번째 ‘노동을 위한 동맹’이 출범한다.

두 번째 ‘동맹’은 첫 번째 ‘동맹’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한 정치적·사회적 환경 아래서 출발했다. 사민·녹색연정은 지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대량실업 문제와 대결해야만 했다. 사민당의 친노동적인 전통 역시 코포라티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도전받기 시작했던 상황, 즉 시장근본주의가 야기한 문제, 특히 대량실업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코포라티즘의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제2차 ‘동맹’은 2002년 1월까지 총 여덟 번의 회동을 가졌다. 1998년 12월 첫 번째 회동에서 노·사·정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열두 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Fickinger 2005, 307). 노동조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 측의 의제였던 것이다. 사용자 측은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며 간접임금 비용을 축소하라는 것이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조기퇴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정부의 관심사였다. 이처럼 노·사·정의 목표들은 나열되었지만, 이 목표들의 차이 또한 명백해 보였다.

1999년 2월에 열렸던 두 번째 회동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7월에 열린 세 번째 회동에서 사용자 측은 보다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1999년 12월 네 번째 회동에서야 대량실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노·사·정은 간접임금의 일부분을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임금비용을 낮추는 시범적인 실험을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이른바 마인츠 모델(Mainzer Modell)에 합의했다. 2000년 1월에 열린 다섯 번째 회동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임금인상 자제를 수용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이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향후 생산성 상승의 범위 안에서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

했다. 이후 노·사·정의 모임은 일 년이 넘게 열리지 않았다. 2001년 3월에야 여섯 번째 회동이 열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정은 서로의 미진한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사용자 측의 약속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7월에 열렸던 일곱 번째 회동에서도 노·사·정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2년 1월 제2차 ‘동맹’의 마지막 모임이 된 여덟 번째 회동이 열렸다. 그러나 이미 노·사 간의 불신은 커질 대로 커졌다. 거기에 임금교섭을 두고 노·사 갈등까지 겹치면서 합의를 기대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결국 제2차 ‘노동을 위한 동맹’은 여덟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Fickinger 2005, 130-184).

제2차 동맹이 진행되면서 확연히 눈에 띄는 점은 ‘동맹’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점차 변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노·사·정의 여러 요구 사항들이 나열되기는 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도 의제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회동이 거듭할수록 ‘동맹’은 주로 사용자 측의 요구사항, 즉 임금인상 억제나 간접세의 인하와 같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Leggewie 1999, 19). 원래 ‘동맹’의 출발점이 노·사·정의 협력을 통해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목할 의제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독일의 경쟁력 강화가 주로 논의되면서 ‘노동을 위한 동맹’은 사실상 노동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쟁력 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1996년 1월에서 2002년 1월까지 총 7년에 걸친 두 차례의 ‘노동을 위한 동맹’의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독일 코포라티즘의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노동과 자본의 이해를 양방향의 대칭적 교환의 토대 위에서 중재했던 전후 코포라티즘의 전통이 무너졌다. 기존의 코포라티즘은 양방향의 정치적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작동했었다. 예컨대 노동 측이 급진적인 사회화의 요구를 포기하자, 자본 측은 기업 경영에서 공동결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했다. 노동조

합들의 파업 자제와 생산성 상승에 대한 협력은 사용자 측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보상되었다. 이러한 양방향의 교환이라는 전통은 새롭게 부활한 코포라티즘에서 매우 일방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사용자 측과 정부는 노동조합에게 임금자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환으로 노동조합이 얻은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약속뿐이었다.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 반증한다.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 11.7%라는 역사적 정점을 기록할 때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쟁력 담론을 적극 수용해 분배중립적인 임금정책과 차별하고 경쟁지향적인 임금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자 편에 섰다(Schulten 2004, 194). 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미 있는 조치로 응답하지 않았다. 요컨대 부활한 코포라티즘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노동 측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비대칭적 교환을 내용으로 했다. 독일의 코포라티즘은 일방적 코포라티즘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노동을 위한 동맹’의 출범이 독일에서 코포라티즘적 전통의 부활을 의미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노·사·정의 협력을 통해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코포라티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의 장이 반복될수록 그 의제는 주로 임금억제로 옮겨 갔다. 즉 코포라티즘의 부활은 그 제도·형태에 국한되었고, 그 목표와 내용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과거의 사회적 대화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Keller and Sörries 1998)가 출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임금억제와 같은 목표를 왜 코포라티즘적 틀에 의존해 실현하고자 했는가? 사용자 측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임금억제를 노동조합들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타협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에 더해 1990년대 초반 생산 입지논쟁은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목표로 부상시켰다. ‘노동을 위한 동맹’이라는 코포라티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설령

‘동맹’에 대한 제안이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먼저 나왔을지라도, 정부와 사용자 측 역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코포라티즘적 틀을 통해 추구하려는 의사가 분명 있었다. 정부와 사용자 측에게 ‘동맹’은 임금억제라는 목표를 노동조합과의 협력 아래 달성하는 기회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상 양방향의 교환 없이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설령 협력이라 지칭하더라도 다분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독일의 새로운 코포라티즘은 상징적 코포라티즘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코포라티즘은 노동조합들을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정책결정 체계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으로부터 등장했다(Bieling and Schulten 2003).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노·사·정이 상징적으로 협력하는, 즉 상징적 코포라티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4. 코포라티즘의 전환의 결과

‘노동을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부활했던 새로운 코포라티즘은 아무런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새로운 코포라티즘에 투영된 노·사·정의 목표와 요구사항의 실현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면 차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 일단 노동조합 입장에서 ‘동맹’의 결과는 실패였다. 일자리 창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맹’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노동조합 내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싱크탱크 격인 한스-뵉클러-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비판의 선봉에 섰고, 특히 금속노조가 여기에 힘을 보탰다(Urban 2000). 반대로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동맹’의 경험은 물론 그 이후의 변화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사용자 측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임금억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장기적인 임금인상 자제에 특별

히 전문화된 전통”(Hassel 2015, 122)을 모범적으로 발휘했다. 유로존의 국가들 중 독일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실질임금이 감소했던 유일한 나라이다. 이 기간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상승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 독일의 실질임금은 2000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4.5%가 줄었다. 임금억제가 초과 달성되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¹⁶⁾ 단일화폐가 이미 도입된 상황이기에 실질임금의 감소는 독일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21세기에 들어 독일의 수출이 가파르게 늘어났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임금억제였던 것이다.

정부, 즉 적·녹연정의 입장에서도 ‘동맹’의 결과는 절반은 성공이었다. 경제 화폐연합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임금억제와 함께 이는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¹⁷⁾ 가파르게 늘어나는 무역수지 흑자가 독일 경쟁력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물론 절반의 성공은 절반의 실패를 암시하는데, 사민·녹색연정의 주요 정책들 중 단 한 가지도 ‘동맹’의 합의를 거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실패의 주요 측면이라 할 것이다(Hassel 2002). 결국 사민·녹색연정은 새로운 코포라티즘과 작별하고 자신의 개혁조치들을 주로 전문가위원회에 의존해 관철시켰다. 코포라티즘은 전문가위원회의 권위에 의해 밀려났고, 일종의 전문가

16) 독일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유로존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플러스였다. 2000년 대비 2010년 실질임금은 이탈리아 3.8%, 네덜란드 4.8%, 스페인 7.5%, 프랑스 8.6%, 아일랜드 15.2%, 그리스 16.0%, 핀란드 22.0%가 늘었다(Monopoli 2013).

17) 임금억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된 것은 유로의 도입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경제화폐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화폐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권한이 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은 흑자국과 적자국의 중간에서 이자율을 결정해야 했는데, 독일 같은 흑자국은 이조차도 부담이 되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유로존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높은 실질 이자율 때문에 투자는 지체되었고, 경제성장률은 정체되었다. 재정정책 역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채무기준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화폐정책적 권한이 사실상 박탈되고 재정정책적 권한 역시 대폭 제약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격적인 수출로 비쳐졌다. 더욱이 단일화폐의 상황에서 임금 수준은 직접적인 가격경쟁력을 의미하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임금억제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위원회 정치로 대체되었다.

사민·녹색연정은 ‘동맹’의 마지막 회동이 무산되자마자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로 호칭된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한다. 나중에 큰 논쟁이 된 ‘하르츠 개혁’으로 유명해진 하르츠(Peter Hartz)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회는 하르츠 자신을 포함하여 절대 다수가 사용자 측을 대표했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5명의 전체 위원들 중 노동조합을 대표했던 위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Butterwege 2005, 186). 노·사·정의 세력관계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적 구성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르츠 위원회는 대량실업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실업당사자들의 노동의지 부족과 함께 행정 영역에서 일자리 중개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들 스스로가 어떤 노동이라도 받아들이는, 즉 노동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사회국가의 안전망은 노동의지를 약화시키기에 안전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복지급여가 줄어 실업자들의 노동의지가 강화된다면 남은 과제는 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임대노동이나 시간제 노동과 같은 유연한 고용형태를 장려해서라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중개해야 한다는 것이 하르츠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200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총 네 단계에 걸쳐 발효된 하르츠 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첫 번째 법안은 실업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했고, 이 보조금이 임금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또한 노동청을 폐지하고 고용 중개 업무를 고용사무소 및 임대노동에 특화된 개인서비스사무소로 분리해 재편하였다. 두 번째 법안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편으로 유사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결정적으로 완화하였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인 월 소득 400유로 이하는 미니잡으로, 월 소득 400~800유로는 미디잡으로 구분하였고, 후자를 사회보장체계로 통합시켰다. 유연한 고용형태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음은 물론이다. 세 번째 하르츠 법안은 연방노동청을 연방고용사무소라는

현대적 경영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서비스기업으로 재편하였다. 연방고용사무소는 고용 중개 역할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네 번째 법안은 “독일 사회정책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Bäcker and Koch 2004, 88)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가장 충격적이었다. 사회국가의 안전망의 대대적 축소와 재편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실업보조금과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실업급여 II’라는 명칭을 부여했고, 기존의 실업보조금보다 적게 지불하도록 했다. 기존의 실업급여는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줄여서 최대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I’로 바꿨다. ‘실업급여 II’를 수령하는 조건도 엄격해졌고, 고용사무소가 제안하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이라도 수락한다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Hans Böckler Stiftung 2006).

‘하르츠 개혁’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적 지원은 눈에 띄게 줄었다.¹⁸⁾ 사민당 지지층의 대대적인 이탈은 이 개혁의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사민당은 ‘하르츠 개혁’ 이후 모든 주의회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했다. 사민당은 자신의 정치적 아성 격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조차 역사상 처음으로 기민련에게 패배했다. 연방상원(Bundesrat)은 보수당 일색으로 변해 갔다. 연방하원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법안도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 하는 상황이 등장했다. 사민·녹색연정은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 스스로를 불신임함으로써 자신 해산의 길을 택한다. ‘하르츠 개혁’에 반발해 사민당을 탈퇴한 상당수의 당원들과 지지층이 ‘선거대안: 노동과 사회정의(WASG)’를 결성했다.¹⁹⁾ 사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그 시작은

18) 하르츠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적 지출을 급격히 축소했던 이유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채무기준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독일정부의 적자는 2001년 이후 줄곧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명시한 국내총생산 대비 3%를 넘고 있었다. 국가채무의 총액 역시 2003년부터 마스트리히트조약 기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60%를 넘어섰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준수, 즉 유럽통합을 진전시켰던 힘은 동시에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을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구춘권 2020).

19) 이 ‘선거대안’이 그 때까지만 해도 구 동독을 대변했던 지역정당이었던 민주사회당(PDS)과 통합함으로써 2007년 좌파당(die Linke)이라는 전국정당이 탄생했다.

바로 ‘하르츠 개혁’이었다고 진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요컨대 독일 코포라티즘의 전환은 오늘날 사민당의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노동의 동맹’의 실패 이후 코포라티즘적 협력은 더 이상 전국적 차원에서 반복되지 않았다. 사민당 집권 시기 무력화된 코포라티즘이 보수·자유연정이나 대연정 아래에서 또 다시 부활할리 만무하다. 독일의 코포라티즘은 기업 차원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위기를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으로 대응했던 폭스바겐(VW) 사례, 생산입지 유지를 위해 고용 유연성과 임금억제를 수용한 술한 기업들의 사례가 미시적 코포라티즘의 최근 경험들이다.

사회적 코포라티즘 시기의 ‘계급타협’은 경쟁적 코포라티즘이 자리 잡으면서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약’으로 대체되었다. 독일의 경우 이 협약은 주로 기업 차원의 노사협력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억제와 더불어 유연한 노동시간의 수용 등 노동조건들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양보한다. 사용자는 일정 기간 구조조정, 즉 강제적 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 이는 간혹 기업의 새로운 투자에 대한 약속과 연계되기도 한다. 원래 이러한 기업 차원의 협약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에서 등장한 것이었지만, 그 사이 상황이 좋은 여러 기업들로도 확산되었다. 이 기업 단위의 협약은 단체협상 및 노동법의 적용을 기업 차원으로 개방하고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산업관계의 탈집중화 과정을 견인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조절 형태를 변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경쟁력 향상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노동의 권력이 위축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크게 줄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1990년대 초반 70% 정도였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46%까지 내려왔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0). 독일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의 보호망 밖에 있다. 독일의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은 전체 고용의 22.2% 정도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다. 신자유주의의 본류인 영국의 저임금 부문을 능가하고 있다(Becker 2015, 241). 미디어잡과 특히 미니잡이 창궐하는 서비스 영역이 매우 열악하다. 이 영역의 저임금 일자리는 거의 60%에 달하고 있다. 놀랍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 덕분에 대량실업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창출의 대부분이 미니잡과 미디어잡들에서 이루어지기에 고용의 질이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니잡을 가진 사람들은 2003년 약 560만 명이었는데, 2008년 약 73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760만에서 780만 명 수준을 유지했고, 2019년 790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Sozialpolitik-Akuell 2020). 2019년 6월부터 미디어잡의 상한선이 1,300유로로 대폭 높아짐으로써 미디어잡 종사자의 숫자 역시 현재 거의 30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20). 미니잡과 미디어잡의 증가분은 대량실업을 완화시켰던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노동의 권력이 위축되면서 사회적 양극화 또한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독일 성인의 27%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오직 부채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1.1%를 소유한다(BPD 2013).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든(1995, 0.422, 2004 0.453, 2014 0.532),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든(1985 0.43, 2000 0.471, 2015 0.504),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든(1985 0.26, 2000 0.27, 2015 0.301) 모든 통계에서 지니계수는 꾸준히 상승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8). 유럽연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유럽연합의 평균보다도 더 높다는 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2018년 ‘빈곤보고서’는 독일 인구의 16.8%에 달하는 1,370만 명이 빈곤 상태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2018). 2016년 이후 4년 내리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유한 나라의 어두운 모습이다.

독일 코포라티즘의 전환은 고용의 질의 악화와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 글의 서두에서 보았듯이 정치적 양극화에도 기여했다. 시민당은 물론이며 중도를 표방하는 기민련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심각하다. 이 두 국민정당의 지지자들의 이탈이 특히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정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다. 독일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전환의 경험은 노동을 주변화한 코포라티즘이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긴장과 결부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노동을 포용하는 새로운 코포라티즘의 발견은 독일 코포라티즘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강명세. 1999. “사회협약의 이론.” 강명세 편.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성남: 세종연구소.
- 구춘권. 2020.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에 대한 고찰 - 경제적 지구화, 유럽 통합,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은 어떻게 연계되어 상호작용했는가?” 『21세기 정치학회보』 30권 2호, 91-122.
- 김면희. 2009. “독일모델의 생명력: ‘독일병’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44권 1호, 327-348.
-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서울: 백산서당.
- 김인춘. 2002.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경제와 사회』 53호, 174-200.
- 송태수. 2006. “신자유주의 도전과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경제와사회』 70호, 190-214.
- 스키텔스키, 로버트. 2000. 『케인스』. 서울: 시공사.
- 안숙영. 2010. “세계화의 사회적 전망.” 『21세기정치학회보』. 19권 2호, 341-362.
- 안재홍. 2013.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울: 후마니타스.
- 암스트롱, 필립/앤드류 글린/존 해리스. 1993.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 정병기·도묘연. 2015. 『코포라티즘 정치』. 서울: 아카넷.
- 정병기. 2009. “서유럽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전환: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 『한국정치학회보』 38권 5호, 323-343.
- 최장집. 1983. “한국 노동조합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3권, 363-383.
- 홉스봄, 에릭. 1997.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서울: 까치.
- Anderson, Perry and Patrick Camiller. 1994. *Mapping the West European Left*. London: Verso.
- Arlt, Hans-Jürgen und Sabine Nehls. 1999. “Das SchröderSchulteHundt-Stück.”

- Hans-Jürgen Arlt und Sabine Nehls. *Bündnis für Arbeit. Konstruktion, Kritik, Karrier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Bäcker, Gerhard und Angelika Koch. 2009. “Absicherung bei Langzeitarbeitslosigkeit. Unterschied zwischen zukünftigem Arbeitslosengeld II und bisher Arbeitslosen und Sozialhilfe.” *Soziale Sicherheit* Nr. 3: 88-95.
- Becker, Joachim. 2015. “German Neo-Mercantilism: Contradiction of a (Non-)Model.” Brigitte Unger eds.. *The German Model – Seen by its Neighbours*. Westfield, NJ: SE Publishing.
- Bieling, Hans-Jürgen. 2014. “Comparative analysis of capitalism from a regulationist perspective extended by neo-Gramscian IPE.” *Capital & Class* 38(1): 31-43.
- Bieling, Hans-Jürgen und Christina Deckwirth (Hrsg.). 2008. *Liberalisierung und Privatisierung in Europa. Die Reorganisation der öffentlichen Infrastruk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 Bieling, Hans-Jürgen und Thorsten Schulten. 2003. “‘Competitive Restructuring’ and Industrial Relations.” Alan W. Cafruny and Magnus Ryner eds.. *A Ruined Fortress? Neoliberal Hegemony and Transformation in Europ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BPD(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3. “Vermögensverteilung.” <http://www.bpb.de/61781> (검색일: 2020. 09. 15).
- Butterwege, Christoph, Bettina Lösch, Ralf Ptak (Hrsg.). *Kritik des Neoliberalismu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Butterwege, Christoph. 2005. *Krise und Zukunft des Sozialstaates*. 2. Auflage. Wiesbaden: Springer VS.
- Deppe, Frank. 1985. *Ende oder Zukunft der Arbeiterbewegung?* Köln: Pahl-Rugenstein Verlag.
- Deppe, Frank. 1997. *Fin de Siècle. Am bergang ins 21. Jahrhunderts*. Köln: PapyRossa Verlag.
- 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2018. “Armutbericht.”

- https://www.der-paritaetische.de/fileadmin/user_upload/Schwerpunkte/Arbeitsberichtericht/doc/2018_armutsbericht.pdf (검색일: 2020. 09. 15).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20. “Midijob wird attraktiver.”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Ueber-uns-und-Presse/Presse/Meldungen/2019/190701_midijob_wird_attraktiver.html (검색일: 2020. 09. 15).
- DGB(Deutscher Gewerkschaftsbund). 2019. “Der Weg zum ersten Bündnis für Arbeit.”
<https://www.dgb.de/themen/++co++62243886-1902-11df-6dd1-00093d10fae2> (검색일: 2020. 09. 15).
- Doerry, Thomas. 1985. *Marxismus und Antifaschismus: zur theoretischen und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des Marxismus, des Sozialismus und der internationalen Arbeiterbewegung mit dem Faschismus an der Macht (1920 bis 1984)*. Köln: Pahl-Rugenstein.
- Esping-Andersen, Gosta. 1985. “Power and Distributional Regimes.” *Politics & Society* 14(2): 223-256.
- Esser, Josef et al. 1979. “Das Modell Deutschland und seine Konstruktionsschwächen.” *Leviathan* 7: 1-11.
- Felder, Michael. 1991. “Hort der Stabilität? Zur Entwicklung der Arbeitsbezieh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rank Deppe (Hrsg.). *Binnenmarkt '92. Zur Entwicklung der Arbeitsbeziehungen in Europa*. Hamburg: VSA.
- Ferner, Anthony and Richard Hyman 1992.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w Europe*. Oxford: Blackwell.
- Fickinger, Niko. 2005. *Der verschenkte Konsens. Das 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 1998-2002*. Wiesbaden: Springer VS.
- Fulcher, James. 1991. *Labour Movements, Employers, and the State: Conflict and Co-operation in Britain and Sweden*. Oxford: Clarendon Press.
- Greef, Samuel. 2014. *Gewerkschaften im Spiegel von Zahlen, Daten und Fakten*. Wolfgang Schroeder eds. *Handbuch Gewerkschaften in Deutschland*.

Wiesbaden: Springer VS.

- Hans Böckler Stiftung. 2006. Die "Hartz-Reform" und ihre Folgen. *Forschungsimpulse für eine innovative und sozial gerechte Arbeitsmarktpolitik*. Düsseldorf: Hans Böckler Stiftung. http://www.boeckler.de/pdf/p_hartz_reform.pdf (검색일: 2020. 09. 15).
- Harrison, Reginald J. 2019. *Pluralism and Corporatism: The Political Evolution of Modern Democracies*. Vol. 27. London: Routledge.
- Hassel, Anke. 2002. "Der mühsame Sprung über den eigenen Schatten." *Frankfurter Rundschau* vom 25. Januar 2002.
- Hassel, Anke. 2015. "The German Model in Transition." Brigitte Unger, eds. *The German Model – Seen by its Neighbours*. Westfield, NJ: SE Publishing.
- Jessop, Bob. 2014. "Variegated capitalism, das Modell Deutschland, and the Eurozone crisis."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2(3): 248-260.
- Keller, Berndt and Bernd Sörries. 1998. "The new social dialogue: procedural structuring, first results and perspectiv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European Annual Review 1997*: 77-98.
- Keynes, John Maynard. 1973.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ume 7. London: Macmillan (first edition: 1936).
- Komsopoulos, Jannis. 2015. "Irland: Alles beim Alten?" Bieling, Hans-Jürgen und Daniel Buhr, eds. *Europäische Welten in der Krise: Arbeitsbeziehungen und Wohlfahrtsstaaten im Vergleich*. Vol. 11.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 Lash, Scott and John Urry 1987. *The End of Organised Capitalism*. Oxford: Polity Press.
- Leggewie, Claus. 1999. "Böcke zu Gärtnern? Das Bündnis für Arbeit im Politikproyess." Hans-Jürgen Arlt und Sabine Nehls (Hrsg.). *Bündnis für Arbeit. Konstruktion, Kritik, Karrier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Lehmbruch, Gerhard. 1977. "Liberal Corporatism and Party Government."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0(1): 91-126.
- Lutz, Burkart. 1992. "Die Singularität der europäischen Prosperität nach dem zweiten Weltkrieg." Hartmut Kaelble (Hrsg.). *Der Boom 1948-1973*.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Marglin, Stephen and Juliet Schor. 1991.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Clarendon Press.
- Mattfeldt, Harald. 1985. *Keynes. Kommentierte Werkauswahl*. Hamburg: VSA.
- Monopoli. 2013. "Trend zu mehr Armut geht weiter."
<https://antilobby.wordpress.com/2013/12/30/trend-zu-mehr-armut-geht-weiter/>
(검색일: 2020. 09. 15).
- Opitz, Reinhard. 1979. "Politische Ideologiekonzeptionen im Vorfeld der Gründung der Bundesrepublik." Frank Deppe u. a. (Hrsg.) *Beiträge zu ein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Köln: Pahl-Rugenstein Verlag.
- Panitch, Leo. 1986. *Working Class Politics in Crisis. Essays on Labor and the State*. London: Verso.
- Ptak, Ralf. 2017. "Grundlagen des Neoliberalismus." Christoph Butterwegge, Bettina Lösch, Ralf Ptak (Hrsg.). *Kritik des Neoliberalismu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Rhodes, Martin. 1998. "Globalisation, Labour Markets and Welfare States: A Future of 'Competitive Corporatism'?" Martin Rhodes and Yves Meny, eds. *The Future of European Welfare*. Houndmills: Macmillan.
- Rötger, Bernd. 1997. *Neoliberale Globalisierung und eurokapitalistische Regulation. Die politische Konstitution des Marktes*.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 Sauramo, Pekka. 2015. "Germany's Success: a Finnish Perspective." Brigitte Unger, eds. *The German Model – Seen by its Neighbours*. Westfield, NJ: SE Publishing.
- Schmitter, Philippe C. 1977. "Modes of Interest Intermediation and Models of Societal Change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0(1): 7-38.

- Schmitter, Philippe C. and Gerhard Lehmbruch. 1979.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Schröder, Wolfgang und Josef Esser. 1999. “Modell Deutschland. Von der Konzentrierten Aktion zum Bündnis für Arb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37/99.
- Schulten, Thorsten. 2004. *Solidarische Lohnpolitik in Europa. Zur politischen Ökonomie der Gewerkschaften*. Hamburg: VSA.
- Shonfield, Andrew. 1965. *Modern Capitalism - The Changing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Power*. London: Heinemann Ed. Books.
- Simons, Rolf und Klaus Westermann. 1997. *Standortdebatte und Globalisierung der Wirtschaft*. Marburg: Schüren.
- Sozialpolitik-Aktuell. 2020. “Beschäftigte in Minijobs 2003–2019.”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tl_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markt/Datensammlung/PDF-Dateien/abbIV91.pdf (검색일: 2020. 09. 15).
-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Lohn- und Einkommensteuer.” Fachserie 14. Reihe 7.1.
-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Tarifbindung von Arbeitnehmern.” <https://www.destatis.de/DE/Themen/Arbeit/Arbeitsmarkt/Qualitaet-Arbeit/Dimension-5/tarifbindung-arbeitnehmer.html> (검색일: 2020. 09. 15).
- Teague, Paul. 1999. *Economic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Employment relations in the new Europe*. London: Routledge.
- Traxler, Franz. 1995. “From Demand-side to Supply-side Corporatism? Austria’s Labor Relations and Public Policy.” Colin Crouch and Franz Traxler eds. *Organized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What Future*. Aldershot: Avebury.
- Urban, Hans-Jürgen. 2000. *Beschäftigungsbündnis oder Standortpakt. Das “Bündnis für Arbeit” auf dem Prüfstand*. Hamburg: VSA.
- Vergunst, Noel. 2010.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Consensus and Conflict: Consensus Democracy, Corporatism and Socio-economic Policy-making and*

Performance in Twenty Developed Democracies(1965-1998). Saarbrücke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Wilke, Gerhard. 2002. *John Maynard Keynes*. Frankfurt am Main: Campus.

Wright, Erik Olin. 2000. "Working-Class Power, Capitalist-Class Interests, and Class
Compromi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4): 957-1002.

투고일: 2020.10.14.	심사일: 2020.11.11.	게재확정일: 2020.11.25.
------------------	------------------	--------------------

Study on the Changes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Koo, Choon-Kweon |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zes the changes and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This analytical process will contribute to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and also the drop of the support rates on the moderate national parties, especially, on the SPD with its background of political crisis it faced nowadays. Two steps will be taken for this process. In the first step, Chapter 2 will survey several theoretical arguments over the changes of the corporatism. Here, du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advent of a new type of corporatism, which is called, competitive corporatism, since the class compromise was shrank in Western Europe. In the second step of the Ch 3,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will be discussed. The time between late 1990s and early 2000s was decisively important i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the revival of corporatism was proceeded in the name of ‘Alliance for Work’. This alliance, however, failed with the degeneration of its goal itself, which resulted in wage suppression just accepting a one way demand of the management and government over the labour, rather than trying to make compromises between labour and capital. This failure shows that the German corporatism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unilateral and mere symbolic one in the end.

Key Words | Corporatism, Germany, German Model, Alliance for Work, SPD